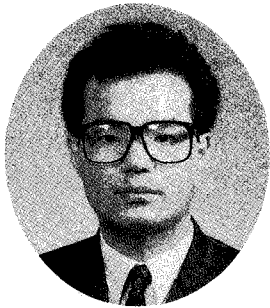


한우 마리당 30만원씩 보장해도 국민소득에 비해 크게 낮아



최준호

농민신문 경제팀기자

정부가 2001년 생소 및 쇠고기 전면 개방에 대응, 7월 14일 발표한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중 한우 큰수소의 경쟁가능 예상가격을 놓고 소 사육농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는 정부가 가격경쟁력에만 집착한 나머지 생산비 수준을 고려치 않고 현실과 동떨어진 경쟁가능 예상가격을 제시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한우값이 정부 목표대로 유지된다 하더라도 농가소득 보장액이 1인당 국민소득에 비해 턱없이 낮아 축산업을 더이상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오는 2001년 수입쇠고기와 경쟁가능한 한우큰수소의 예상가격을 2등급 기준 5백kg 한마리

당 2백만원선(1등급은 2백30만원선)으로 제시해 놓고 있다.

이는 2001년 개방시점에서 국내 식육유통업자가 도매시장에 상장되는 수입쇠고기를 구입하는 방안과 산지에서 한우를 구입하여 도축·유통시키는 방안을 비용측면에서 비교해 계산한데 따른 것이다.

또 일본 화우와 미국산 수입쇠고기와의 가격차이를 감안할 때 한우고기가 수입쇠고기보다 육질과 신선도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1.8배정도 비싸더라도 소비자가 한우고기를 구입할 것으로 보고 품질계수 1.8을 적용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한우큰수소 한마리당 2등급 기준 예상가격을 97년 2백40만원, 98년 2백30만원, 99년 2백20만원, 2000년 2백10만원, 2001년 2백만원 등으로 매년 10만원씩 낮춰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비육우 농가의 경우 2001년 송아지를 한마리당 74만원(암수 평균)에 구입해 사료값 등 생산비 86만원과 적정소득 보장액 30만원을 합쳐 1백90만원에 한우큰수소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한농연) 등 농민단체와 한국낙농육우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한우사육농민들은 현실을 무시한 생산비

설정과 낮은 소득보장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5백kg 한우큰수소 한마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등 제비용을 뺀 송아지값과 배합사료값만 2백만원 이상 들어간다」고 전제하고 「특히 비육은 한우수소를 대상으로 하는데도 송아지 구입값을 암수 평균값으로 계산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사료값 오름세도 배제했다」며 2등급 기준 경쟁가능 예상가격을 2백3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또 「정부는 경쟁가능 예상가격만 유지해도 한우 한마리에 30여만원씩의 농가소득이 보장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전업규모인 50마리를 길러도 1천5백여만원에 불과하다」면서 「국민소득 1만달러(국민 1인당 연간 8백70만원) 시대에 4인 가족이 15개월 동안 달라붙어 한달평균 1백여만원의 소득을 올려 생계나 꾸릴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결국 정부는 2001년 예상가격이 유지될 경우 비육농가는 2등급 기준 5백kg 한우큰수소 한마리를 1백90여만원에 생산 30여만원의 소득을 올릴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농민들은 1백90여만원은 생산비에도 턱없이 못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